

KOSBI 중소기업 포커스

미대선 이후 미중 무역분쟁의 전망과 중소기업 영향 및 시사점

책임작성 | 홍성철 연구위원(02-707-9835, schong@kosbi.re.kr)
김상훈 연구위원(02-707-9889, hmbkim@kosbi.re.kr)

※ KOSBI 중소기업 포커스는 중소기업연구원 홈페이지(www.kosb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목 차

1. 서론
2. 미중 무역분쟁 경과 및 전망
3. 국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4. 정책적 시사점

| 요약

- 최근 들어 미중 갈등이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됨에 따라 국내 중소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전적으로 점검해볼 필요
 - (경제) 미중 양국 간 1단계 무역합의 체결, 기존의 '관세전쟁'에서 경제적 패권 유지를 위한 '첨단기술전쟁'으로 국면이 전환
 - (정치·외교) 양국 간 무역합의에도 불구하고 홍콩, 대만, 남중국해, 위구르 이슈 등을 둘러싼 지정학적 이해관계 대립이 확대되면서 新냉전 국면 진입
- (1단계 무역합의) 미중 양국은 금년 1월 15일 '미중 1단계 경제무역 합의문'에 공식 서명함으로써 그 동안의 분쟁을 일단락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
 - 1단계 무역합의는 양국 간 경제적 갈등을 조정하는데 초점
 - (중국) 미국산 제품 수입규모 확대,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및 기술이전 강요 금지, 환율조작 금지, 금융시장 외국인 지분제한 철폐 등의 이행을 약속
 - (미국) 1,600억 달러 규모의 추가관세 부과 계획 철회, 기존 관세율 인하 (1,120억 달러, 15%→7.5%), 환율조작국 해제 등을 약속
 - 1단계 합의문 내에 양국 간 분쟁 발생 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포함

- 1단계 합의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무역분쟁이 재점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
 - 향후 정치적·외교적 상황 변화, 지정학적 이슈를 둘러싼 이해관계 대립 등에 따라 양국 간 추가적 무역제재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1단계 합의 핵심내용 중 하나인 중국의 대미 수입 확대가 부진한 상태를 담보, 미국의 대중국 압박은 당분간 상당한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
- 한편 미중 간 무역분쟁은 근본적으로 전략적 동기(패권경쟁)에 기인한 것인 만큼 미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갈등 양상이 장기간 전개되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
 - 코로나 19 이후 미국 내 반중 정서가 초당적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간 대중국 정책에 큰 차이가 없어 대중 공세 강화 기조는 지속될 전망
 - 구체적인 통상정책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미국의 대중 견제와 자국중심주의 성향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
 - 특히 양국 간 핵심 첨단기술 및 안보를 중심으로 하는 기술패권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
 - 최근 미국이 연이어 중국의 주요 IT·플랫폼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 역시 첨단기술 패권 유지를 위한 중국 견제 일환이라는 평가
- 미중 간 갈등 장기화는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 회복을 지연하는 요인으로 작용, 특히 장기적으로 통상체제 재편 등을 가속화시켜 부담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
 - (실물) 세계 1, 2위 교역국가인 미국과 중국의 갈등 장기화는 양국의 국내생산 및 중간재 수입 회복을 지연시켜 국내 중소기업 수출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금융) 당분간 원화 강세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 미중 무역분쟁 전개 양상에 따라 환변동성이 급격히 높아질 가능성도 존재
 - 장기적으로는 첨단기술을 둘러싼 미중 간 전략적 패권 경쟁으로 글로벌 밸류체인 및 통상체제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국내 수출입 중소기업의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
 - 본 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미중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이 100p 상승할 때 국내 중소기업 수출은 당기에 0.5%p, 1기 이후에 0.8%p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

■ 급변하는 국제 통상환경 하에서 국내 수출입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책을 적극 마련할 필요

- 단기적으로는 국내 수출입 중소기업이 급격한 환변동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련 지원을 강화할 필요
- 장기적으로는 기술적 시장지배력에 기반한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수출시장 및 생산기지 다변화 등 미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 필요

1. 서론

■ 그 동안 지속되어온 미중 갈등이 최근 들어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기 시작

- (경제) 미중 양국이 1단계 무역합의를 체결함에 따라 기존 '관세전쟁'에서 경제적 패권 유지를 위한 '첨단기술전쟁'으로 국면이 전환
 - 1단계 무역합의를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대규모 추가관세 부과 계획을 철회하는 동시에, 기존에 부과해오던 관세 상당폭 인하
 - 반면 화웨이(Huawei), 틱톡(TikTok), 위챗(WeChat) 등 중국의 주요 IT·플랫폼 기업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면서 빅테크 산업 내 주도권 경쟁 강화
- (정치·외교) 양국 간 무역합의에도 불구하고 홍콩, 대만, 남중국해, 위구르 이슈 등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新냉전 국면 진입
 - 미국은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등 패권을 둘러싼 전략적 경쟁 지속

■ 미중 간 새로운 갈등 양상이 경제적 측면에서 국내 중소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전적으로 점검해볼 필요

- (실물) 세계 1, 2위 경제 강국이자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 간 잠정적 대립 완화는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입 여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
 - 실제 코로나 19 영향 등으로 그 동안 부진했던 국내 중소기업 수출은 최근 들어 미국, 중국을 중심으로 개선세를 보이면서 감소폭이 빠르게 축소*
 - * 중기 수출(% , 전년동월비): ('20.5) -23.4 → (6) -2.3 → (7) -3.7 → (8) -3.2
- (금융) 위안화 통화가치를 둘러싼 미중 간 대립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될 경우 국내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
 - 최근 원화는 대체적인 달러화 약세 흐름 속에 위안화와의 동조 현상이 나타나면서 강세 흐름*을 시현
 - * 원달러(원, 평균기준): ('20.6) 1,210 → (8) 1,186 → (10.5) 1,169

2. 미중 무역분쟁 경과 및 전망

- (무역분쟁) 美 트럼프 대통령이 '18년 3월부터 'America First' 기조 하에 대중 무역압력을 행사하면서 미중 양국 간 갈등이 확대
 - 미국은 표면적으로 미중 양국 사이의 무역 불균형 해소를 주장, '24년까지 대미 무역수지 흑자 제로(0)를 달성할 것을 중국에 요구
 - 동시에 지적재산권 보호, 강제 기술이전 방지, 정부 보조금 축소, 시장진입 제한 완화, 환율조작 중단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 이행 요구
 - 이에 대해 중국이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양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
 - 중국은 무역 불균형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이 필요하지만, 경제시스템 개선 요구 등은 내정 간섭이라는 입장을 견지
 - 양국은 상호 5차례에 걸친 추가관세 및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19년 말까지 분쟁 국면을 지속
 - 미중 무역분쟁으로 양국 간 무역실적이 일제히 큰 폭으로 감소하며 세계 교역 둔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
 - (미국) '19년 기준 對세계 수입(24,984억 달러)은 전년대비 1.7% 감소, 동기간 對중국 수입(4,522억 달러)은 16.2% 감소
 - (중국) '19년 기준 對세계 수입(20,769억 달러)은 전년대비 2.8% 감소, 동기간 對미국 수입(1,277억 달러)은 20.9% 감소

〈표 1〉 미중 상호 관세 부과 사례

시기	美 → 中 관세 부과	中 → 美 관세 부과
2018년 7월	340억 달러 (818개 품목, 25%)	338억 달러 (545개 품목, 25%)
2018년 8월	160억 달러 (279개 품목, 25%)	142억 달러 (333개 품목, 25%)
2018년 9월	2,000억 달러 (5,745개 품목, 10%)	600억 달러 (5,207개 품목, 5~10%)
2019년 5월	2,000억 달러 (5,745개 품목, 10% → 25% 인상)	580억 달러 (5,140개 품목, 5~10% → 5~25% 인상)
2019년 9월	1,120억 달러 (3,229개 품목, 15%)	285억 달러 (1,717개 품목, 5~10%)

자료 :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2020) 재구성

- (1단계 무역합의) 미중 양국은 금년 1월 15일 ‘미중 1단계 경제무역 합의문’에 공식 서명함으로써 그 동안의 분쟁을 일단락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
 - 1단계 무역합의는 그 동안 대립해 왔던 양국 간 경제적 갈등을 조정하는데 초점
 - (중국) △미국산 제품 수입규모 확대*,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및 기술이전 강요 금지, △환율조작 금지, △금융시장 외국인 지분제한 철폐 등의 이행을 약속
 - * 중국은 '20년 1월부터 '21년 12월까지 2년에 걸쳐 2,000억 달러 규모의 상품 및 서비스 추가 수입 예정, 품목별 수입 목표액을 합의서 내 명시
 - (미국) △1,600억 달러 규모의 추과관세 부과 계획 철회, △기존 관세율 인하 (1,120억 달러, 15%→7.5%), △환율조작국 해제 등을 약속
 - 1단계 합의문 내에 양국 간 분쟁 발생 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포함
 - 6개월 마다 최고위급 회의를 개최하여 양국의 합의이행 정도를 평가하며, 분쟁 발생 시 실무급-차관급-장관급 협의를 통한 갈등 조정방안을 합의서 내 명시

〈표 2〉 미중 무역합의 1단계 주요내용

항목	주요 내용	시장 평가
지식재산권	- 영업기밀, 지리적 표시, 트레이드마크, 저작권 침해 및 위조품 생산 등에 대해 제한을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중국이 이미 일정부분 관련법 개정 등의 조치를 통해 반영해 온 부분
기술이전	- 외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진입, 행정상 승인 등을 위해 행해야 했던 기술이전 관련 관행을 중단하기로 합의	- 미중 무역합의의 기본 방향을 재확인했지만 선연적 수준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존재
식품 및 농산품 무역	- 상호 식품/농산품 교역확대 합의 - 중국의 미국산 식품/농산품 수입을 위한 관련 절차 완비	- 동 조항으로 식품/농산품, 금융업 등에 대한 미국기업의 중국시장 진입이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
금융서비스	-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미국기업에 대한 중국 시장 개방 확대 - 일정 기한 내 미국기업의 자기자본한도 제한 및 외자진입 제한 철폐	- 타 국가 제품이나 기업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가능성
환율	- 환율 관련 정책에 대한 투명성 제고, 경쟁적인 통화가치 절하 등 제한 - 매월 말일 후 30일 이내 관련 수치 공개	- 환율 이슈는 관세와 더불어 가장 핵심적인 쟁점 사항 중 하나 - 미국의 대중 압박에 대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평가
무역확대	- 2020~2021년 동안 중국은 대미국 상품을 2017년 기준보다 2,000억 달러 이상 수입 - 품목: 공산품, 음식료 제품, 농수산물, 에너지 상품, 서비스 등	- 1단계 무역합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다수

자료 : 현대차증권, 한국무역협회 재구성

■ 다만 1단계 합의에 대한 긍정적 시장 평가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무역분쟁이 재점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

- 금번 무역합의는 자국 내 상황변화에 따른 양국 정상 간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

- 중국은 최근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경기둔화 기조*를 반등시키기 위해 무역합의가 필요했다는 평가

- * 중국 GDP성장률(%): ('18) 6.7 → ('19) 6.1 → ('20.상반기) -1.6

-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국면 전환과 재선 준비를 위한 경제적 성과 달성 등을 위해 중국과의 합의를 서둘렀다는 분석

- * 지난 해 12월 12일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체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뉴욕증시가 설립 이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미국 내 주요 증시가 모두 오름세 시현

- 향후 정치적·외교적 상황 변화, 지정학적 이슈를 둘러싼 이해관계 대립 등이 발생할 경우 양국 간 추가적 무역제재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양국은 중국의 구조적 무역관행 개선, 미국의 징벌적 과세 방지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2단계(Phase 2) 협상을 바로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여전히 논의에 착수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

- 금년 11월 예정된 미국 대선 전까지 양국 간 잠재적 갈등 발생 가능성은 상당히 높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

-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지지율 제고효과 등을 위해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모두 대중국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외교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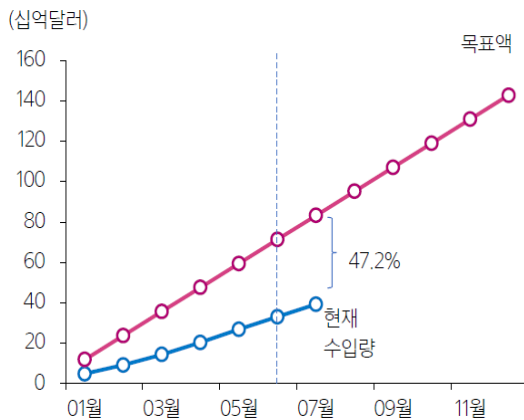
〈표 3〉 최근 미중 간 정치·외교적 갈등 사례

사안	미국/중국 입장
코로나 책임 소재	- 미 행정부는 책임 보복조치로 관세 추가부과 가능성 거론(4.30) - 백악관 피터 나바로 정책국장은 미중 무역합의 파기 가능성 언급(6.22)
홍콩 국가보안법	- 미국의 홍콩 특별 지위 박탈에 대해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일시적으로 중단(6.1)
위구르 문제	- 중국 양제츠 외교담당 정치국원은 위구르 문제 등 내정에 대한 레드라인을 넘어설 경우 1단계 무역협정 이행이 불가함을 공식 전달(6.27)

자료 : 언론 보도 재구성

- 특히 1단계 합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중국의 대미 수입 확대가 부진한 상태를 담보하고 있는 만큼 미국의 대중국 압박은 당분간 상당한 수준으로 유지 될 것
 -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에 따르면 실제 중국의 대미 수입 확대 이행률은 7월 말 기준 목표치의 약 4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합의 위반에 따른 분쟁 발생 시 90일 이내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도록 합의문 내 명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잠재적 리스크 발생 여지가 존재
 - 지난 8.15일로 예정되었던 미중 고위급 합의이행 점검회의가 6개월 연기됨에 따라 향후 중국의 이행정도가 양국 간 합의 지속가능성의 중요 지표가 될 것으로 예상
- 다만 최근 위안화 환율 조정이 일부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금년 2분기 달러당 7.2위안대를 기록했던 위안화는 최근 6.7위안대로 하락하며 뚜렷한 강세 흐름을 시현
 - 시진핑 지도부 역시 자본시장 육성 및 소비시장 성장 등을 위해 점진적 위안화 강세를 지지하는 입장

[그림 1] 미중 1단계 무역협상 이행률



자료 :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삼성증권
 주1 : 7월 말 미국 수출데이터 기준
 주2 : 품목별 이행률은 공산품 58%, 농산품 39%, 에너지 24%

[그림 2] 위안/달러 추이



자료 : 한국은행

- 한편 미중 간 무역분쟁은 근본적으로 전략적 동기(패권경쟁)에 기인한 것인 만큼 미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갈등 양상이 장기간 전개되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 2020년 5월 美 백악관이 발표한 보고서는 미중 갈등이 첨단기술을 둘러싼 안보 및 패권경쟁에 기인한 것임을 명시¹⁾
 - 미 행정부는 중국제조 2025, 중국표준 2035 등 중국의 정부주도 첨단산업 육성 정책이 시장원리를 위반하고 미국의 안보와 산업경쟁력을 훼손한다고 인식
 - 코로나 19 이후 미국 내 반중 정서가 초당적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간 대중국 정책에 큰 차이가 없어 대중 공세 강화 기조는 지속될 전망이다
 - 구체적인 통상정책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미국의 대중 견제와 자국중심주의 성향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
 - (트럼프) 현 대중 정책 기조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 무역구제조치나 슈퍼 301조, 무역확장법 확대 적용 등을 통해 고립주의적 보호무역이 한층 강화될 가능성
 - (바이든) 강력한 관세부과 등 보호무역 기조는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대중 견제를 위한 동맹국 간 연대 강화 및 미·중 간 양자택일을 요구할 가능성

〈표 4〉 미 대선 후보 간 대중국 및 무역 관련 주요 공약 비교

항목	트럼프	바이든
대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우선주의 정책 및 중국 불공정 관행 시정 압박 지속 등 대중 강경 행보 강화 - 불공정 무역관행 중지를 강제할 수 있는 조치 시행 - 통상·인권·국방 등 전방위적으로 중국과 대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의 부상을 심각한 과제로 인식, 동맹국과의 연대 강화를 통한 광범위한 압박전선 구축 주장 - 미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조 - 미국 기업에 대한 중국정부 주도의 사이버공격에 대한 제재조치 시행 - 트럼프보다 인권 문제에 더 큰 집중
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 부과 등을 통한 무역 상대국과의 공격적인 대립 및 양자 간 협의 선호 - NAFTA를 USMCA로 재협상하여 디지털 경제, 환경 정책, 환율 조작 관련 조항과 자동차 원산지 규정 강화 등을 개정 - 중국, 일본, 인도, EU, 영국, 브라질과 양자 협상 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상적으로 의회 경력 동안 자유무역을 지지, 일방적 관세 정책 비판 -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지지 - 향후 미국과 TPP간 무역 협정에 대한 지원 표명

자료 : 세종연구소(2020), 언론 보도 재구성

1) The White House, "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May 20, 2020.

- 특히 양국 간 핵심 첨단기술 및 안보를 중심으로 하는 기술패권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
 - 미국은 AI, 빅데이터, 로봇, 항공우주, 양자컴퓨터 등 주요 국가안보 및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대중국 견제 강화를 위해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대폭 확대 중
 - 중국 역시 최근 수출관리법을 통화시키는 등 미국의 제재에 대해 티포탯(tit-for-tat) 전략이 아니라 장기적 비전과 전략적 목표를 지닌 ‘새로운 대장정’ 전략으로 대응
 - * 중국 시진핑 주석은 2019년 미국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새로운 대장정’ 용어를 사용, 해당 발언을 통해 내부적 단결을 촉구하는 동시에 미국과의 무역전쟁 장기화를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²⁾
- 최근 미국이 연이어 중국의 주요 IT/플랫폼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 역시 첨단기술 패권 유지를 위한 중국 견제 일환이라는 평가
 -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가 화웨이를 포함한 통신영상장비·반도체 분야에서 틱톡, 위챗 등 플랫폼 비즈니스로 빠르게 확대
 - 제재의 표면적 이유는 ‘중국이 미국인의 개인 및 독점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잠재적으로 중국을 위한 기업 스파이 활동에 이용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지만, 본질은 미중 간 기술패권 다툼의 연장선이라는 분석이 대다수

〈표 5〉 미국의 첨단기술 분야 대중국 제재 강화를 주요 법안 제정 사례

법안명	제정 시기	주요 내용
Export Control Reform Act	2018년	- 14개 첨단기술 및 기초기술 분야에 대한 대중국 수출 규제 강화
2019 NDAA Section 889	2019년	- 중국 통신·영상관련 5개社(Huawei, Hikvision, ZTE, Dahua Technology, Hytera)와 미국 정부 기관과의 거래를 명시적으로 금지
Foreign Invest Risk Review Moderation Act	2018년 (2020년 정식발효)	-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중국의 대미 투자 규제 - 소비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유출)도 규제대상으로 확대 - 이미 완료된 투자에 대해서는 자산매각 명령 적용 가능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0) 재구성

2) Foreign Policy, “China has two paths to global domination”, 2020.5.22.

3. 국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 (실물) 세계 1, 2위 교역국가인 미국과 중국의 갈등 장기화는 국내 중소기업 수출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미중 간 갈등 장기화는 글로벌 교역 회복과 경기반등에 대한 기대심리를 지연시키는 동시에, 크게 세 가지 구체적 경로를 통해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

- ①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에 따른 양국의 국내생산 및 중간재 수입 회복 지연
 - 국내 중소기업 수출비중 1위, 2위 국가가 중국과 미국이며, 수출 중 중간재 및 자본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상당한 부담이 될 가능성
 - * 중소기업의 국가별 수출(비중, %, '19년): 중국(23.1), 미국(11.6), 베트남(10.3)
 - * 중소기업의 재화성질별 수출(비중, %, '19년): 소비재(18.9), 원자재(31.8), 자본재(49.3)
 - 한국은행(2016)은 중국의 대미수출이 10% 감소할 경우 한국 총수출은 0.36% 감소할 것으로 추정
- ② 미중 양국 간 무역갈등 장기화 영향으로 기타국산 중간재 수입감소가 발생할 경우 기타국의 한국산 중간재 수입감소 발생 불가피
 - 아세안 지역 국가들의 무역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만큼 네트워크 내 특정 국가의 수출 감소는 지역 전체에 연쇄적 영향을 줄 수 있음
- ③ 중국이 1단계 합의 이행을 위해 대미 공산품 수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일부 국내 제품 수입이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기계, 화학제품, 화장품 업종에서 중국의 對미국 수입 증감률이 對세계 수입 증감률을 상회하며, 타 국가 제품의 대체 가능성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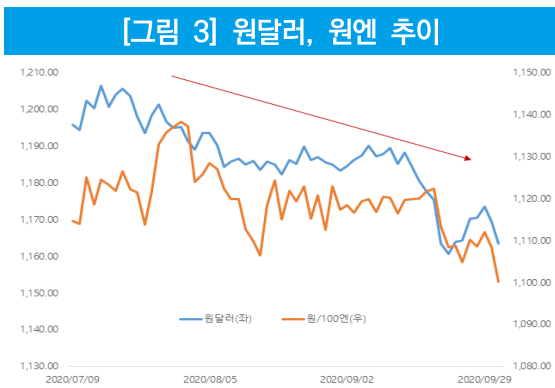
〈표 6〉 중국의 공산품 세부 수입 현황(2020년 1분기 기준)

품목	對세계 수입		對미국 수입		對한국 수입	
	수입액 (백만달러)	전년동기 증감률(%)	수입액 (백만달러)	전년동기 증감률(%)	수입액 (백만달러)	전년동기 증감률(%)
기계	41,025	-6.7	3,760	1.1	4,771	-10.2
화학제품	14,514	-18.6	1,023	9.0	2,799	-28.1
화장품	3,404	4.0	353	6.9	752	5.1

자료 : 한국무역협회(2020) 재구성

■ (금융) 당분간 원화 강세 흐름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 미중 무역분쟁 전개 양상에 따라 환변동성이 급격히 높아질 가능성도 존재

- 위안화 강세 동조화, 위험자산 선호심리 확대 등으로 당분간 원화 강세 흐름 예상
 - 1단계 무역합의로 무역분쟁 이전 수준까지 추가 절상될 여건이 마련된 가운데,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구조 상 원화 동반 강세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
 - 또한 미국 연준이 2023년 말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명시한 상황에서 미중 무역분쟁 완화는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심리를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원화 강세 흐름이 지속될 경우 국내 수출 중소기업 가격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음
 - 자동차, 타이어, 조선, 석유화학, 섬유, 전자 등 중소기업 수출 비중이 높은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가격경쟁력 약화 우려
 - 원달러 환율이 아직은 대응 가능한 박스권 내에 있지만, 최근 하락 속도가 가파른 만큼 심리적 마지노선(1,100원) 붕괴에 유의할 필요
 - 다만 환율 하락에 따른 원자재 수입단가 하락 등은 수입 및 내수 중소기업에 일부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한편 미중 분쟁 전개 과정에서 원화 환변동성이 급격하게 높아지면서 국내 중소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될 가능성도 존재
 - 환율조작 이슈는 양국 간 핵심 쟁점 사항 중 하나로 미중 분쟁 전개 양상에 따라 환변동성이 급격하게 높아질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
 - 국내 수출 중소기업의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환리스크 관리가 취약하고, 환율 변동성에 대한 완충능력이 부족한 실정임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삼성증권

■ 장기적으로는 첨단기술을 둘러싼 미중 간 전략적 패권 경쟁으로 글로벌 밸류체인 및 통상체제 변화가 가속화될 경우 국내 수출 중소기업의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

• 미중 간 패권 경쟁으로 첨단기술 등 일부 산업을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이 각자 중심이 되는 역내가치사슬(RVC, Regional Value Chain)이 형성될 가능성

- 중국 고립화를 위한 미국의 견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며, 중국 역시 첨단기술 및 관련 산업구조의 자립화·고도화를 더욱 공고히 함에 따라 코로나19 이후 나타나고 있는 GVC 재편이 가속화될 것

- 실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2.0인 미국·멕시코·캐나다(USMCA) 협정*이 금년 7월 발효되면서 북미 지역의 역내가치사슬이 한층 더 강화되는 흐름

* 해당 협정은 3국 간 원산지 및 노동규정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 예를 들어 자동차 원산지 규정은 역내가치비율 75% 이상(기존 62.5%) 달성을 명시

* 특히, 비시장국가(중국 등)와의 FTA 체결 희망 시 여타 회원국에 최대한 협조해 협상목적과 협정문을 체결 전에 전달하도록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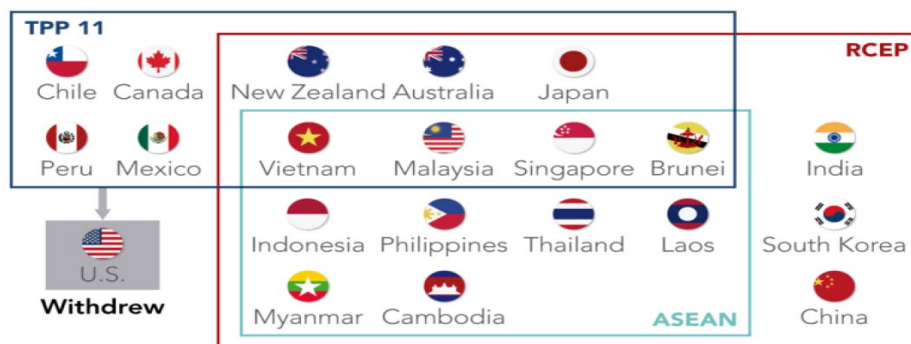
• 미중 간 기술전쟁 장기화 및 그에 따른 거대 경제권 형성은 결과적으로 보호무역주의 확산 흐름으로 이어져 국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

- 다자주의 자유무역체제의 리더십 부재* 등으로 미국과 중국을 두 축으로 하는 거대 경제권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가능성

* 지난 9월 WTO가 관세분쟁에서 중국 입장을 지지하자 미국은 WTO가 중국 편향적이라는 언급과 함께 강하게 반발

- 특히 최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을 양축으로 경제블록이 재편되고 있다는 점은 아세안 시장 의존도가 높은 국내 중소기업 수출에 상당한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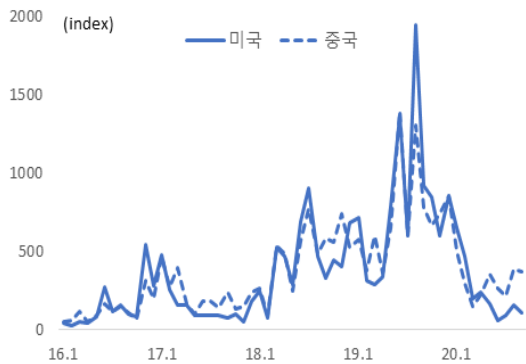
[그림 5] 아시아태평양 지역 무역협정 재편 현황



자료 : 김대중(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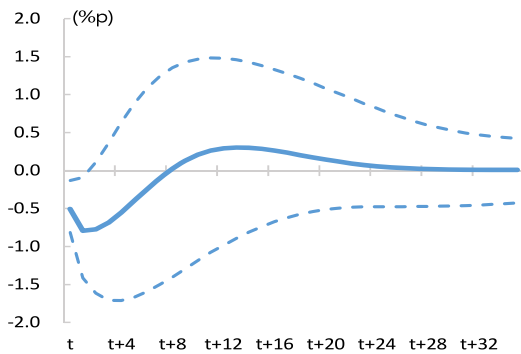
- VAR* 분석에 의하면, 미중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이 100p 상승할 때 국내 중소기업 수출은 당기에 0.5%p, 1기 이후에 0.8%p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
 - * 미중 갈등이 무역 분쟁을 중심으로 확산되면 G2 무역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글로벌 교역 위축 및 경제성장 둔화가 우려될 수 있는 점을 착안
 - * VAR 모형은 G2 무역정책 불확실성 지수(美·中 지수 평균), 세계 교역 증가율, 중소 수출 증가율로 구성(최적시차는 SIC기준에 따라 2)
 - * 세계 교역과 중소 수출은 계절조정 자료를 이용하고, 3변수 모두 불규칙성 완화를 위해 3개월 이동평균 사용(분석기간 15.1월~19.12월)

[그림 5] 미중 무역정책 불확실성지수



자료 : Economic Policy Uncertainty

[그림 6] 미중 무역정책 불확실성의
중소기업 수출 영향



자료 : 중소기업연구원

4. 정책적 시사점

- 단기적으로는 국내 수출입 중소기업이 급격한 환변동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련 지원을 강화할 필요
 - 수출 중소기업의 환헷지 상품 가입을 사전적으로 유도하는 동시에, 일시적으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거나 채산성이 악화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환위험관리 지원 강화
 -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30% 이상이 환위험 관리를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환변동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실정(한국무역보험공사, 2017)
 - 통화옵션보다 상대적으로 구조가 단순하고 고정환율을 사용하여 이해가 수월한 선물환이나 환변동보험 등의 환헷지 상품 가입을 유도하여 급격한 환변동에 대한 노출도를 사전적으로 줄여나가는 노력 필요
 - 특히 과거 키코(KIKO) 사태 등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환헷지 상품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보험상품 가입을 위한 홍보 및 정책적 방안 마련
 - 필요한 경우 무역 금융·보증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급격한 환율 하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방안 마련
 - 과도한 환율 쏠림현상 방지 및 거시건전성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시장 모니터링 시행
 - 9월 정책 당국은 국내 증시·환율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공식적으로 언급, 관련된 시장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할 필요

〈표 7〉 선물환 및 환변동보험 비교

법안명	선물환(Forward)	환변동보험
거래주체	금융기관	무역보험공사
계약환율	은행 선물환율	은행 평균 선물환율
비용(1년 기준)	선물환율에 마진 포함	보험료(0.04%p 이내)
증거금	신용도에 따라 요구	없음
최소금액	통상 USD 1만 이상	제한 없음
거래한도	신용도에 따라 제한	수출(입) 실적 기준
손익정산	실물인도 원칙	차액정산 원칙
거래기간	통상 1년 이내	최장 5년(수출거래)

자료 : 한국무역보험공사

- 장기적으로는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수출시장 및 생산기지 다변화 노력을 지속할 필요
 - 급격하게 변화하는 국제 통상환경에서 국내 중소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핵심은 기술적 시장지배력을 확보하는 것
 - 재편되는 시장질서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기술, 디자인, 품질 등에 기반한 비가격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며, 특히 기술에 기반한 시장지배력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 국내 중소기업이 강점을 지닌 디지털장비, ICT 인프라, 주요 소재부품 품목 등의 고부가가치화가 필수적
 -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및 스케일업 등을 위한 지원을 적극 강화할 필요
 - 동시에 수출시장, 생산기지 다변화 노력을 통해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완화해 나갈 필요
 - 높은 성장잠재력과 지리적·문화적 근접성을 갖추고 있는 동아시아는 향후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
 -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신경제구상’을 통해 한반도가 북방 및 남방지역을 연결하는 교량으로서 기능한다면 미중에 의존적인 기존 질서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장질서 재편을 형성할 수 있음
 - 최근 국내 중소기업의 아세안 지역 진출이 가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수시장 직접 상품 공급보다 제조 대기업을 따라 동반 진출한 협력사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서비스업 진출 비중이 높은 상황
 -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시장 다변화와 아세안 시장 진출 및 현지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필요
 - *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집·해소하는 원스톱창구를 마련하고, 현지 생산네트워크에 쉽게 편입할 수 있도록 매칭박람회를 비롯한 기업 간 교류자리를 마련하는 등 현지 공급체인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

참고자료

- 김대중(2020), 「미중 통상분쟁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 한국무역학회 국제학술대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0), 「첨단기술을 둘러싼 미중 간 패권 경쟁 분석」.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8), 「신남방정책의 추진과 중소기업의 아세안시장 진출 전략」.
- 삼성증권(2020),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시사점」.
- 삼성증권(2020), 「미중 분쟁 Update」.
- 세종연구소(2020), 「2020 미국 대선 전망과 후보간 정책 비교」.
- 유진투자증권(2020), 「Global Economy」.
- 중소기업연구원(2018), 「미중 무역분쟁이 국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 중소벤처기업부(2020), 「2020년도 상반기 및 2분기 중소기업 수출 동향」.
- 통계청(2020), 「2019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2020), 「미중 1단계 무역합의 경과 및 우리 수출 영향」.
-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중 관계의 향방」.
- 한국은행(2016), 「對 중국 수출의 최종 귀착지 분해」.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s://ecos.bok.or.kr/>), 최근 접속일: 2020. 10.5
- 현대차증권(2020), 「미중 1단계 합의」.
-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2020), 「US-China phase one tracker: China's purchases of US goods」.
- The White House(2020), 「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KOSBI 중소기업 포커스

발행인 : 이병헌

편집인 : 이동주

발행처 : 중소기업연구원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1가길 77 (신대방동 686-70) (07074)

전화: 02-707-9800, 팩스: 02-707-9894

홈페이지: <http://www.kosbi.re.kr>

인쇄처 : 사단법인 나눔복지연합회

-
-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연구진)의 견해이며, 중소기업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본지의 내용은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